

보도시점 2025.03.12.(수) 11:00 배포 2025.03.12.(수) 08:00

조달 참여기업 권리구제 기회 확대 등을 위한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개선방안」 마련

- 김윤상 제2차관, '25년 제1회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분쟁조정 대상 확대, 청구가능기간 연장 등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 혁신제품 생산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구매목표액 7,985억원 설정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3.12.(수) 10:00 무역보험공사에서 「제1회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여 ①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개선방안, ②'25년 혁신제품 지정계획 및 구매목표 설정, ③'25년 제1차 혁신제품 지정 및 연장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부는 공공조달 참여기업들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국가계약 관련 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하였다.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는 국가(공공기관 포함)와 공공조달 참여기업간의 분쟁에 있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소송을 대체하여 합리적인 조정대안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2013년 도입되었다.

먼저, 최근 급증하는 분쟁조정 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 15인 이내인 전체 위원 정원을 30인 이내로 확대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국방·방산분야 소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이다.

* 분쟁조정 제기 건수: ('14) 1건→('19) 10건→('24) 53건

이와 함께 영세 조달기업 관련 사안이 많은 소액사건은 심사 절차를 통합하고 간이심사로 대체하여 더욱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 (현행) 수리여부 결정→ 소위원회(10인)→ 본위원회/ (개선) 간이 소위원회(3인)→ 본위원회

특히, 공공조달 참여기업에게 분쟁조정을 통한 권리구제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었다.

첫째, 현재 10개*인 분쟁조정사유는 국가계약 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지연배상금', '선금반환'을 추가하여 12개로 늘어난다.

* 국제입찰 범위, 부당특약,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 낙찰자 결정, 입찰계약보증금 국고귀속, 계약금액 조정, 개산계약 등 정산, 지체상금, 계약해제(10개)

둘째, 물품·용역 등 다른 계약*보다 분쟁조정 대상 금액기준이 높은 ‘종합공사’의 기준은 10억 원 이상에서 4억 원 이상으로 낮춘다.

* 여타 계약의 기준: 전문공사 1억 원 이상, 기타공사 8천만 원 이상, 물품·용역 5천만 원 이상

셋째, 조달기업이 발주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간*과 발주기관의 장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각각 연장한다.

* (이의신청) 사유발생일로부터 20일→ 30일, 또는 사유발생을 안 날로부터 15일→ 20일

** (분쟁조정청구) 통지 받은 날로부터 20일→ 30일

아울러, 피청구인이 분쟁조정결과 수용여부를 더욱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이의제기 시 계약심의위원회 자문결과 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청구인의 피청구인 의견서 열람권을 보장하는 등 청구인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들도 다수 포함되었다.

한편, 정부는 혁신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 노력으로 '20년 345개 지정을 시작으로 전년도까지 2,280개의 혁신제품을 지정하였고,

* 중앙관서의 장이 공공서비스 향상(공공성)과 기술혁신(혁신성)을 인정하여 지정한 제품

지정된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 지원을 위한 '25년 혁신제품 구매목표액을 7,985억원으로 설정하였다. 정부, 지자체, 등 기관별 목표 금액*은 구매 여건과 전년도 실적 달성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차등 설정하였으며, 목표 달성 여부를 정부업무평가, 지자체 합동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함으로써 혁신제품의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 (중앙부처) 1,342억원, (지자체) 3,709억원, (공공기관) 2,766억원, (지방공기업) 168억원

김윤상 차관은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빠르게 적용되도록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아울러 “'25년 혁신제품 구매목표 설정으로 기관 우선구매를 통해 혁신제품 제조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고, 혁신제품의 초기 시장 창출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하며, 관련 제도 정비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하였다.

기획재정부	국고국 공공조달정책과	책임자	과 장	노판열 (044-215-5230)
		담당자	사무관	송재경 (jksong14@korea.kr)
	국고국 계약분쟁조정과	책임자	과 장	임재정 (044-215-5640)
		담당자	사무관	이민정 (minjung2@korea.kr)